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정부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정부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누적되어 최근 수년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조짐이 뚜렷해졌습니다.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의료개혁을 미룰 수 없는 시점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에 놓고, 전공의 등 의료계 안팎의 합리적 제언을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개혁정책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현황을 전공의의 7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요구 1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 위한 기구 설치

#### 정부 대응

- △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위한 기구 구성 방안 발표(8.30)
- △ 의료계 전문가 위원 추천 등 거쳐 올해 내로 추계기구 설치 및 운영 예정

### 요구 2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 정부 대응

- △ 올해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지나친 전공의 노동 의존도를 낮추고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전환 추진 중
- △ 수가 인상 및 예산지원 통해 적정 전문의 확보를 지원하고 전공의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할 예정

### 요구 3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 정부 대응

-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위해 올해 내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 의료사고 형사 특례 도입 추진
- △ '25년부터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금 한도\* 상향 추진 중
  - \* 기존 최대 3천만원 → 개선 최대 3억원
- '25년부터 필수의료분야 전공의에 대한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료·공제료 지원 추진

### 요구 4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 정부 대응

- △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법」 개정 완료('24.2월) 및 시행 예정('26.2월)
- △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24), 주당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25)을 거쳐 적정 수련시간(안)을 마련·실시할 예정('26.2월)

### 요구 5 전공의 대상 명령 전면 철회

#### 정부 대응

- △ 6월 4일부터 전공의 대상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전면 철회

### 요구 6 의료법 제 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 정부 대응

- △ 6월 4일부터 전공의 대상 업무개시명령 전면 철회
- △ 다만 의료법 동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책임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 요구 7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 정부 대응

- △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의대 정원(안)에 대해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계획
  - 다만, 2025년 정원은 수시모집 등 관련 절차 진행 중으로 변경 불가
-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전문의 채용 확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전공의 포함 의료계가 그간 요구해온 사항임

## 요구 1

# 과학적 의사 수급추계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 논의

## 정부대응

정부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보건의료·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수급 추계기구 구성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 발표)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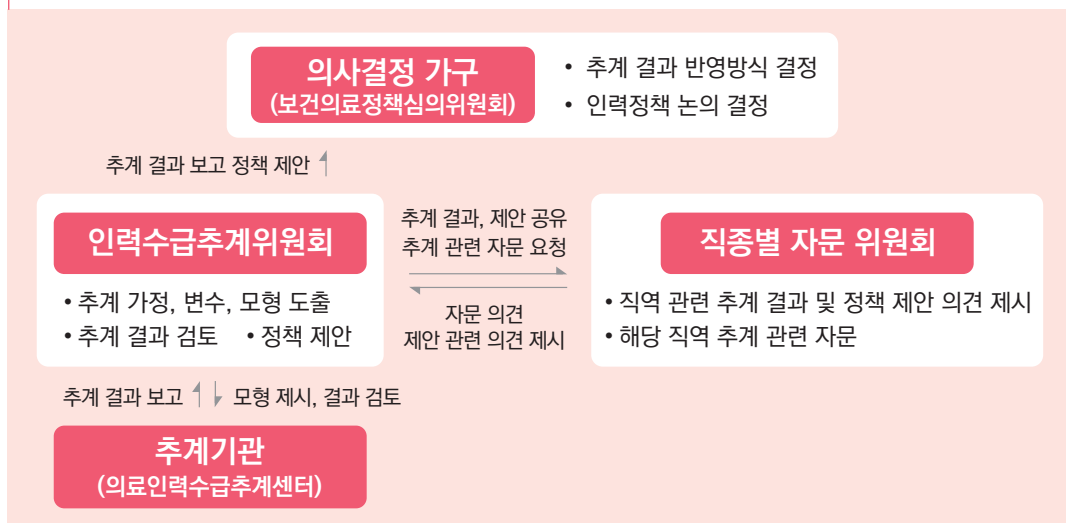
정부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 과반수)를 구성하여 **과학적 수급 추계 모델 및 데이터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동 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 등이 참여한 대표성 있는 기구\*에서 **의대 정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계에 전문가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연내에 **과학적 수급 추계기구**를 출범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안**을 제시할 경우 **2026학년도 정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안)



#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

## 정부대응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2.1.발표)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히고, 속도감 있게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이 적정 전문의 확보 없이 병상·진료량 확대에 집중함에 따라, 잦은 당직 등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면서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규모 확장보다 본래 기능인 중증진료·연구·교육에 집중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에서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하여, 5대 분야(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구조전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올해 10월 초부터 참여 기관을 모집하여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조 전환을 하면서도 상급종합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에 대해 보상(연간 3.3조원 규모)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인력 채용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 ◆ 5대 분야 : ① 진료, ② 진료협력 ③ 병상, ④ 인력, ⑤ 전공의 수련
- ◆ 중증-응급-희귀질환자, 상급종합병원에서 긴 대기 없이 최우선으로 충분한 진료
- ◆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근로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안정적 운영
- ◆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줄이고 중환자 병상 확대, 병상 확장 유인 제거
- ◆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 병원에서 진료받고, 상종 진료 필요시 패스트 트랙
- ◆ 전공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여건 획기적 개선, 우수한 전문의로 성장에 집중

### 요구 3

##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구체적 대책 제시

### 정부대응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2.1.발표)의 하나로 최선을 다한 진료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 완화, 불가항력 사고 보상 국가 지원 확대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사고 사건 수사·처분 가이드라인('24.2월 법무부) 시행

① 응급의료법상 의료사고 형 감면 적극 적용 ② 의료분쟁조정제도 적극 활용 ③ 사전준비 없는 출석요구 자제 및 명백히 범죄 아닌 경우 신속 종결 ④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 의료인 참여

의료개혁 특위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형사 특례 도입',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확립'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사고 형사 특례 도입'과 관련하여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필수의료분야에서 발생하는 중상해 사고를 포함하되, 일부에서 우려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올해 내 입법화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기존 최대 3천만원 → 개선 최대 3억원)', 필수의료분야 전공의\*에 대한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료·공제료 지원 등을 통해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 요구 4

#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

### 정부대응

정부는 **전공의법을 개정**(’26.2월 시행 예정)하여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존) 주당 80시간, 연속 36시간 →

(개정) 주당 80시간, 연속 36시간 이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정부는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현재 시범사업 참여병원으로 총 42개소를 선정하고, 14개 병원에서는 36시간의 연속 근무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개시 기관(14개)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해운대백병원, ▲분당차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내년도에는 주당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 수련시간 안을 마련하여 ’26년 2월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도 강화하여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 2025년도 예산안 :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3천억원 신규 편성 등 총 4천억원

# 전공의 대상 명령 전면 철회

## 정부대응

정부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에 따라 의료 현장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6월 4일부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였습니다. 우리 의료계의 소중한 자산인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독려하는 뜻을 담았습니다.

###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6.4.)

“정부는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합니다.”

또한,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수련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7.8.), 이에 따라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8.30.), 세부지침을 시행(9.6.)하였습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7.8.)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특례를 마련하겠습니다.”

### 수련특례 법령 근거 : 수련규정(대통령령) 제5조제7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재난 심각단계 발령 등의 경우로서 의료인력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 수련기간·수련연도 및 추가 수련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 정부대응

정부는 전공의들이 오해를 풀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전공의에게 부과한 업무개시 명령을 6월 4일부터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의료법 제59조는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등 사회구성원의 생명·건강·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국민 보건에 관한 보호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사항입니다.

이는 국민보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해당 규정은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 정부대응

정부는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미래 의대 정원에 대해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이미 확정되어 수시모집 등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사 인력 확충 뿐만 아니라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강화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이며, 대부분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공감하는 과제 중심으로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차 실행방안 중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세부 이행계획 마련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정부는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전공의 여러분,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

많은 국민들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동료 의료진의 피로도가 점차 커지고 암 환자와 같은 중증질환자의 수술이 지연되는 등 환자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 명령을 철회하여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의사로 복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전공의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7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도 추진하는 등 대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에 놓고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정부와 전공의가 국민과 환자, 그리고 누구보다 전공의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린 토론을 통해 선하고 현명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정부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